정비비 명목 25억, 차량 구매비용 등 부당 사용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당·위법 운영 무더기 적발
지원금 부당사용·범죄 경력 조회 없이 채용 등 16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버스업체의 부당·위법사례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6건은 시정, 6건은 주의, 2건은 개선, 1건은 권고, 1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업체의 과다 산정 등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 12억원을 회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는 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 최근 3년간(2016~2018) 10개 운송업체가 정비비 명목으로 지원한 25억원을 정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송차량 구매비용 부족분 또는 보험료, 표준운송원가 지원항목 중 적자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구매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운송차량 감가상각비 3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적정이윤 산정 과정에 총괄원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적정한 기준없이 지원하면서 69억원을 절감하지 못하는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차량 운행 거리, 운영 일수 등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 정비비 등 12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운송업체 별 인건비, 차량 정비비 등 지원액 절감을 위해 반기별로 차량별 이용내역 등을 조사·분석하고, 표준운송원가에 운송업체별 실운행거리와 사고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평균값을 도출하도록 주의·개선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부 운송업체들은 규정에도 없이 결혼, 사망, 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회비 4400만원과 항공료 6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된 식비, 통근버스비 등을 기타 복리후생비로 이중으로 계산, 11억원을 과다산정해 지급한 것도 드러나 광주시가 이를 회수토록 조치했다.

운송업체별 수입금, 운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교통시설개선금을 사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공모 절차도 없이 면접으로만 운전직을 채용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1억 이상 관급공사 발주정보 제공

올 발주 436건 대상
공사명·시기·공사비 등 소개

광주시는 지역건설업체 등에 관급공사 발주계획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 자치구, 공사·공단, 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로 총 436건, 3457억원이 대상이다.

제공되는 내용은 기관별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비, 시행부서 등 발주관련 계획과 건설업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번 발주계획 정보 제공은 발주정보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는 법령 및 놓치기 쉬운 제도를 안내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다.

책자는 자치구 건설과 및 민원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건설사업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관급공사 발주 정보를 건설관련 협회와 건설업체에 제공함해 지역건설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한국 건설행정과장은 "발주계획은 책자 배포는 물론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10개 선정

행정안전부 지정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 공모에서 전남도내 10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목포(주)만인계마을기업, 여수 꼬물꼬물곤충나라, 순천 농업회사법인 화목마을(주), 광양 (주)해우, 곡성 삼기흑찰옥수수영농조합, 장흥 자연속에영농조합, 해남 비슬안·농업회사법인연호(주), 장성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 완도 청산도의미래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 사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지정될 2020년 2차 마을기업으로 전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염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행안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의 전남 점유율이 10.1%로, 경기도(11.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라며 "도내 마을기업의 지난해 평균매출은 지난 2018년 대비 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
전남도, 2배 이상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고민하고 있는 전남도가 마을공동체를 강화시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법을 내놓는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지를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지를 지난해 172개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1개소를 1차 선정했고, 2차 추가 공모를 통해 47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1차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도민 5명 이상 모여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씨앗단계 259개소 ▲이미 활동 중인 공동체를 활성화한 새싹단계 82개소 ▲자립형 공동체를 지향한 열매단계 10개소로 개소당 250만~2000만원까지 총 21억600만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일빌딩 245' 헬기사격 모형 전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이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있다. 건물 옥상에 정원과 소규모 공연장이 조성되고 있고 9층과 10층에는 기념공간이 마련되는 등 518을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전일빌딩은 도로명 주소가 '광주 동구 금남로 245'로 지정된 데다 발견된 탄흔의 숫자도 245개라는 점에 착안해 '전일빌딩245'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됐다. 전일빌딩 245는 3~4월께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군 농촌드라마 제작 지원 2억 '떼일 판'

전남도 종합감사 52건 지적

영광군이 농촌드라마 제작을 지원한다며 혈세를 지원했다가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사실이 전남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정 군의원에게 제작사를 소개받은 영광군이 타당성 검토나 선금 채권 확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잔금을 지급했다가 탈이 난 것으로, 특혜·비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가 공개한 '2019 영광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A군의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업체가 드라마 제작을 제안하자 2017년 6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사사례 검토 등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채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협찬 금액 지원 근거를 만든 뒤 문화관광과에서는 추경에서 2억원을 긴급편성했다. 사전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3개월만에 업무협약 체결, 조례 제정, 예산 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어 군은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가며 같은 해 12월 15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6일 선금 6000만원을 입금했고 이듬해 11월까지 1억40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지급 전 계약 상대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고 계약 이행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1심에서 영광군이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제작사가 영세해 2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하고, 군에는 전액 환수 방안을 강구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영광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전남도는 52건의 업무 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견책 등 신분상 조치를, 부적정 집행된 9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서·벽지 어민들 어업용 기자재 무상 수리 나서

'이동수리소' 14일까지 모집

도서·벽지 어민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가 운영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9일 "도서·벽지 등 어업용기자재 정기 점검·수리가 어려운 어촌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위해 14일까지 수리업체와 참여 어촌계에 대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는 수리업체가 직접 어촌계를 방문해 어선용 기관과 어업·양식용 장비 등을 무상 점검·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어업인 1인당 1회 10만원 이내의 부품교체 등 서비스를 연 2회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11개 시·군 151개 어촌계, 25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업인들은 현지에서 전문정비사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참여를 희망한 어촌계와 수리업체는 전남도청(www.jeonnam.go.kr) 및 해양수산과학원(ofsi.jeonnam.go.kr)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도서·벽지에 거주한 어업인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